

트럼프, 이란에 핵포기 시한 제시

“보름이 최대치” 핵 프로그램 폐기 수용...이란 압박

미국의 대(對)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미국과의 핵 합의 시한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최대 시한은 보름이다. 일단 미국이 요구하는 바, 즉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핵 프로그램 폐기를 수용할 것을 이란에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격하기 직전에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한 적이 있어서 ‘보름’이 되기 전에 군사작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을 거론,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6월 미국의 최첨단 군사 무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을 언급한 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의미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방식의 정밀 타격이던 작년 6월 미군의 대이란 공격에 비해 공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간단하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동은 평화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특히 이날 오전 언급한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한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나쁜 일’의 의미를 묻자 “그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동에 항공모함 전진을 비롯해 엄청난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이

란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전날부터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1일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한 ‘함박의 망치’ 작전을 명령할 때도 이와 비슷한 시한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는 실제 작전일 이들 전인 같은 달 19일 케틀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감지 말지름(대이란 공격을 할지 말지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튿날인 20일에는 기자들이 ‘2주 후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며 2주라는 시간은 “(이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음 날인 21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2주’ 언급은 ‘연막전술’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최대 보름’의 시한이 작년 6월처럼 연막전술일지, 아니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협상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꺼낸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의회 권한”

트럼프, 대법 판결에 반발 “전세계에 새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허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당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

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지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